

악성·생떼 민원에 골머리 앓는 구청장들

광주 언어 폭력·업무 방해 일췌 청장실까지 찾아와 행패도

행정력 낭비 등 대책 마련 시급

민선 7기 6개월을 넘긴 광주지역 신임 구청장들이 악성·생떼 민원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복되는 황당한 민원에서부터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직접 청장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각종 악성민원이 잇따르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일부 자치구에선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비치하고 있지만, 악성민원인 줄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각 자치구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민원접수 어플, 전화 등을 통해 하루 평균 2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악성·생떼 민원이 상당수라는 게 자치구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광주시 남구에 사는 A(80)씨는 지

민선 7기 생떼 민원 보니	
●	"틀니 비용 달라" 매주 방문 민원
●	노점상 허가 촉구 웃통 벗고 난동
●	도로 방음벽 설치 집요하게 요구
●	어린이 보호 노란 신호등도 반대

난해 6월 한 차과에서 100% 본인부담인 150만원 상당의 '부분 틀니' 시술을 한 뒤, 8개월째 남구청을 찾아 진료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내가 왜 자비로 틀니를 해야 하나"면서 현재까지 매주 한 차례씩 남구청을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최근엔 남구청장실로 찾아가 진료비 지원을 요구하며 우는 바람에 남구 공무원들 사이에 공포대상이 됐다.

지난해 11월엔 광주시 서구청에서 민원인 B(50)씨가 웃통을 벗고 한바탕 난동을 부렸다. B씨는 "곧 있을 축제에서 자신이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가, 담당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자 행패를 부린 것이다.

북구에선 초등학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악성민원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광주시가 최근 북구 소재 모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기능이 높은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려 하자, 인근 슈퍼마켓 주인과 공장 등 업체 관계자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신호등이 설치되면 손님이 가게 앞에 주차장을 할 수 없고, 공장을 수시로 오가는 차량의 이동시간이 지체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결국 문인 북구청장까지 직접 나서 해당 주민들을 설득했고, 2주일 여 공사기간이 미뤄진 끝에 완공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신호 등 설치를 모든 주민이 반길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고 말했다.

북구청장은 또 최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 사업으로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마을 골목길에 배수관을 묻는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한 주민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못하게 해 공사비에 버금가는 금전적 손실을 봤다. 해당 주민은 땅을 파는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집 벽에 금이 갈 수 있다며 수일간 공사를 방해한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이 한명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구에선 임박 동구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관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와 해결해야 할 인근 도로 방음벽 설치를 집요하게 구청측에 요구해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준공된 H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불과 70여m 떨어진 광주 제2순환도로로 인접 10여 년간 소음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해 왔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이 나설 수 없는 문제임에도 임 구청장이 중재에 나선 끝에 건설사가 방음벽을 설치로 하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언어폭력, 업무방해 등 상식에서 벗어난 지열물품의 과다 요구 등 다양한 형태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이들이 호소할 곳은 거의 없다.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실맛이 재롱에 흐뭇한 어르신들

30일 광주시 북구 중흥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실맛이 어린이 재롱잔치에 참석한 꼬마박사 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르신들 품에 안겨 재롱을 떨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영암 쌍둥이' 허위 출생신고 브로커 추적

전남경찰, 인우보증 선 여성 2명 소재 파악 나서...과거 동종 전과

전남경찰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허위 출생신고가 들뜬 난 '영암 쌍둥이' 사건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30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을 썼던 이모(50)씨와 정모(39)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씨와 정씨가 주소지로 등록된 경기도 모처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들은 과거에도 허위 출생신고에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A(여·28)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출산한 것처럼 속여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뒤 해외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이달 초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쌍둥이 형제가 나오지 않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0여년 전부터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주고 여권을 발급받아 친척이 있는 본국으로 보내주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브로커와 뒷선의 행방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단체, 햄버거병 위험 패티 재고 은폐 맥도날드 고발

한국맥도날드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된 패티가 매장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며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정지하는 엄마들"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한국맥도날드와 정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마땅히 재수해 한국맥도날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용혈성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를 둔 시민과 일반 시민 300여명, 환경보건시민센터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패티 공급업체인 맥키코리아가 2016년 6월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및 시가독소가 검출됐다고 맥도날드 측에 알렸으나 맥도날드 측이 이미 패티를 전량 소진했다고 식약처에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맥도날드 직원이 임원에게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았다'고 보고했으나 임원이 '식약처에 전량 소진했다고 보고하러'고 지시한 이베일이 검찰 수사에서 확보됐다"며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전형적인 재벌기업 밥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법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제품이 전량 회수 및 폐기됐음을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 광주 오경애 할머니 등 5명 2심 승소

광주출신 오경애(89)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수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오 할머니 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전범기업 중에서 여자근로정신대를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으로, 1944~1945년 당시 도야마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동원된 한국 소녀만 1089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

난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 할머니 등 5명은 지난 2015년 4월 한국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냈으며, 1심 법원은 2016년 11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내에서 3건이 진행 중이다. 오 할머니는 2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제기된 1차 소송에는 여수 출신 김계순(89), 순천 김경숙(88) 할머니 등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3일 3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송금채 2명 검거

광양경찰, 여죄 수사

광양경찰은 3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송금채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정모(여·35)씨와 이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지난 해 말부터 지난 29일까지 자신의 계좌로 1억원에 송금받은 뒤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9일까지

24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전달받고 왔던 혐의가 있다.

정씨는 지난 29일 광양 일대 금융기관 여러 곳을 돌며 돈을 찾아 이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고객 출금을 의심한 금융기관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는 인출금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했고 이씨는 송금 대가로 1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인사장 대량 발송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검찰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 대량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 A씨를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전남지역 모 조합 조합원 1080명 중 985명(91.2%)에게 송신 인사장을, 같은해 12월3일 조합원

950명(88%)에게 신년 인사장을 각각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북구의회, 북구청 검토부 부실 운영·규정 위반 적발

광주북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부실 운영,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위는 지난해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부의 허위 전지훈련이 드러남에 따라 시정조치와 검토부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 결과 허위 전지훈련비 부당수령, 감독 책임용 관련 업무규정 위반, 각

종 훈련 시 특정 업소 식대 전액 지출, 검도장비 구입 특정업체 편중 등이 확인됐다.

특별위는 북구청에 검토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검토부 감독 책임용 과정에 업무규정 위반에 따른 부당지급액 환수, 각종훈련 이행검증과 훈련비 집행 점검, 북구청 검토부 운영 개선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음주운전 30대 하필이면 순찰차와 부딪혀 '경찰서행'

○...음주운전을 하다 하필(?)이면 경찰순찰차와 부딪힌 30대가 곧바로 경찰서행.

○...30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9시50분께 이모(37)씨가 운행하던 투싼 차량이 나주 남해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박았다는 것.

○...이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3%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경찰 2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며 "이씨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을 조사해 원칙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68934	1	북구 두암동 329 반석힐라 101동 2층 207호	아파트	71,000,000	
2018타경 69135	1	남구 백운로67-6, 102동 2층 209호 84.90	아파트	149,000,000	
[대지/일야/전답]					
2018타경 13477	3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497 1044㎡ [현황과]	답	140,664,000	수목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14517	1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 277 1792㎡ [농지취득]	전	14,873,600	타인소유추진전지특자격증명요
2018타경 64062	1	남구 서동 261-92 331㎡ [조영지전49분의9]	대	14,774,400	공유자우선매수권 9인분, 지분매각, 현황도문
	2	동소 261-93 165㎡ [조영지전49분의9인분]	대	7,302,300	공유자우선매수권 지분매각, 현황도문
2018타경 67184	1	화순군 이양면 관성리 382-5 3000㎡ [간구]	답	6,600,00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10분의1인분, 농지취득자격증명요
				6,600,000	우선매수권행사1명요, 회로제안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8타경 15022	1	서구 서정로13, 3층 320호 [치병동,상부리]	근린시설	77,000,000	주거용오피스텔로 26,811㎡이용됨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자동차, 중기]					
2018타경 70494	1	사용본거지:나주시 봉천면 옥곡동출입 21동 등록번호:전남70자4648 차형:BH120 연식:2007	자동차	11,000,000	본권장소:광주서문별주차장
2018타경 71343	1	사용본거지:광주 남구 백운로44번길 12 [백운동] 등록번호:59사2473 차형:카니발 연식:2014	자동차	17,000,000	본권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하동]송원주차장
[기타]					
2018타경 13590		북구 월송동 970-74 1594.9㎡	공장용지	1,443,320,900	일괄매각, 제시외
2018타경 15288		북구 청단면지소로37번길 14 [월송동,제1동] 면적 959㎡ 제시외 기계설 5.7㎡	공장	1,443,320,900	건물포함, 공장및 광업재단지담법제6조시계기구유전부일설로매각제외
2018타경 68385	1	서구 농성동 648-30 50.9㎡	도로	11,198,000	주차장으로이용중

● 공공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를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각이 불능이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발행실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합판 제140조의 의한 우선매수권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고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금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2. 14.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2. 21.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집행부
5. 매각방법
① 집행부에서 매각된 기일방법에 따른 법원, 집행부의 청문,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납입한 보증금을 통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위탁하면 된다. 매수신청인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집행하는 공매기일 방법의 차이를 주의할 수 있다.
②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준비하기
①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매수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9. 1. 31.

광주지방법원 사법부좌관 정현주